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이우진**

본 논문에서 우리는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겨진 쟁점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1) 불평등의 수준 및 추이에 대한 연구들, (2) 다양한 소득형태가 전체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3)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2)와 (3)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과 함께 최근 피케티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거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 특히 기능적 소득 분배론에 입각한 연구들도 요약한다. 필자의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주제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기회불평등, 고령화,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I. 서론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높은 성장율이 20년 넘게 지속되었고 동시에 양호한 분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상황은 반전되어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반면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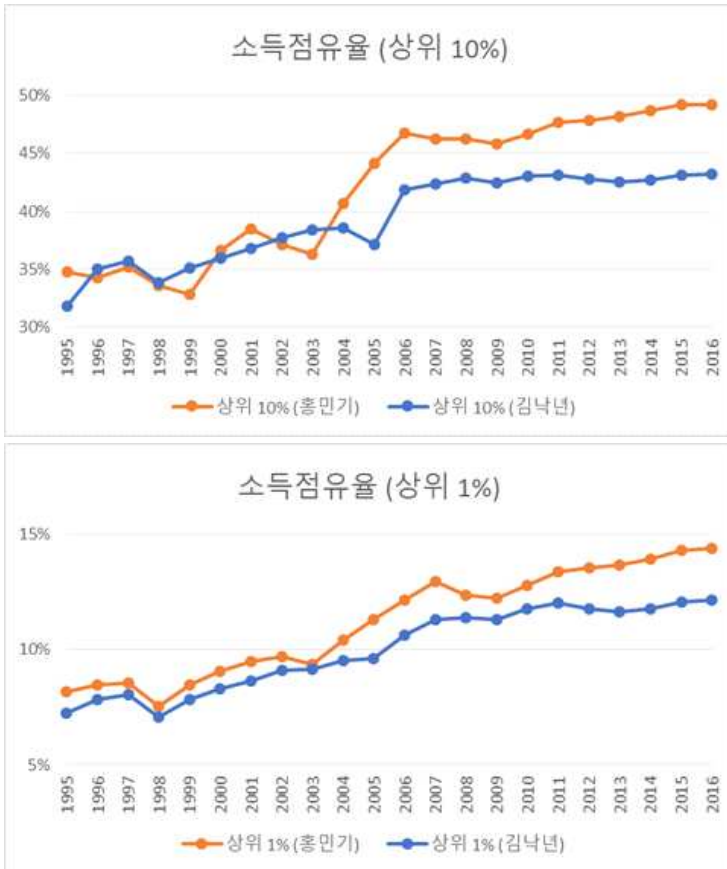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3S1A5B8A01054750). 이 글의 일부 표와 그림은 필자가 기존에 작성한 논문들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 UC Davis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정학, 분배이론, 정치경제론 등이다(woojinlee@korea.ac.kr).

범한 문제인 정부는 불평등 개선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먼저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어떤 지표를 이용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김낙년(2018)과 홍민기(2015)는 상위 10%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을 추정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점유율은 1995년에 31.8~34.8%이던 것이 2016년에는 43.2%~49.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점유율도 1995년에 7.2~8.2%에서 2016년 12.1~14.4%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상위 10%와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점유율이 40~80%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상위 10%와 상위 1% 소득자들의 소득점유율



출처: 김낙년(2018), 홍민기(2015).

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의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경제학적으로 소득은 유량(flow)의 개념인 반면 자산은 저장(stock)의 개념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한 사회에서 매우 작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 혹은 순자산이 음인 사람들의 비율은 한 사회에서 매우 크다. 예컨대 실업자들을 제외하면 인구의 대부분은 약간씩이라도 소득이 있지만, 순자산이 양인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30%를 넘지 못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는 자산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부분에 의해 자산의 대부분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면 자산불평등의 원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이 상속(inheritance)이나 투기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같은 것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자산의 형성동학은 소득의 형성동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불평등이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경제적인 불평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충분히 감수할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이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인 불평등 수준의 높고 낮음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페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발표한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Freund & Oliver, 2016)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억만장자 중에서 상속으로 인해 억만장자가 된 비율이 74.1%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전 세계 평균은 30.4%이고, 보고서 상에서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쿠웨이트(100%), 핀란드(100%), 덴마크(83.3%) 밖에 없다. 미국은 28.9%만이 상속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고, 일본은 18.5%, 대만은 17.9%, 중국은 2%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이데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겨진 쟁점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해 살펴보는데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각각 얼마만큼씩 기여하는지 사플리값 분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기존연구들의 통설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우리나라 소득불평

등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면 노동소득의 불평등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 과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 이 논문에서 우리는 노동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3장은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이 사회경제적인 성취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주어진 환경의 차이에 의한 부분과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함께 기회의 불평등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피케티의 연구들에 의해 촉발된 거시자료를 활용한 불평등 연구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한다.

II.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1. 노동소득의 불평등 대 자산소득의 불평등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가구는 자산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는 노동자들 사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문제 등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불평등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 특히 부동산자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저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 및 증여나 자본이득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이나

1) 예컨대 장하성은 그의 최근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장하성을 비롯하여 기존의 많은 논문들은 Lerman and Yitzaki의 분해방법을 사용하여 불평등분해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전체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자본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아닌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결과는 여러 종류의 소득 형태들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평등이 가장 큰 소득형태는 자산소득이다. 따라서 비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불평등이 심한 정도를 강조하면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불평등의 연구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제적인 비교로 Davies & Shorrocks(2000)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웨덴, 일본, 한국 등의 순자산 점유율과 지니계수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순자산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매우 높고, 금융자산과 상속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전체의 불평등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박기백(2014)은 2009~2011년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의 유형별로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변이제공계수(Squared Coefficient Variation)를 활용하여 각 원천소득의 1년간 변화가 전체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의 공분산 효과는 -0.335정도로 분산효과 0.420을 상쇄하고 있어 노동소득의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반대로 자산소득의 공분산 효과는 양수로 나타났고, 자산소득 증가분 대비 변이제공계수의 변화가 노동소득에 대한 변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이성재·이우진(2017)은 샤플리값 분해를 활용해서 소득원천별 불평등의 기여도를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재정패널 1차~7차(2008~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집단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전체의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평등의 분해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04년의 경우 평균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가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4.2%로 나타나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전체불평등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영점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이용하면 자산소득의 기여도가 약 80%를 차지하고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35.3%로 나타나 반대로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주된 요인이며 노동소득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성재·이우진(2017)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본다.

2. 샤플리값 분해법

샤플리값은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참여자들이 협동으로 얻은 총생산물을 각각의 한계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에 따라 배분하는 균형배분규칙이다. 예컨대 참

여자가 세 명인 협조적 게임을 가정해보자. 세 명의 참여자가 그룹을 지어 협동을 통해 생산하는 방법은 $2^3 = 8$ 가지이며 각각의 8가지 협동방식에 따른 총생산물을 나타내는 보수표(payload table)가 다음의 <표 1>로 주어진다고 가정해보자.

<표 1> 부분집합의 보수 (예)

부분집합(S)	$v(S)$
\emptyset	0
{1}	1
{2}	2
{3}	3
{1,2}	2
{1,3}	3
{2,3}	6
{1,2,3}	6

우리는 세 명의 참여자들의 생산에 대한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고 싶다. 그런데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의적이지 않다. 예컨대 세 명의 참여자가 순서대로 생산과정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세 명의 참여자가 순서대로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 = 6$ 가지인데 이 여섯 가지의 경우에 대해 각각의 참여자가 어떤 순서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각 참여자의 생산에 대한 한계적 기여는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참여자 1, 2, 3의 순서로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면 참여자 1의 한계적 기여는 $v(\{1\}) - v(\emptyset) = 1 - 0 = 1$ 가 되고, 참여자 2의 한계적 기여는 $v(\{1,2\}) - v(\{1\}) = 1 \times 2 - 1 = 1$, 참여자 3의 한계적 기여는 $v(\{1,2,3\}) - v(\{1,2\}) = 1 \times 2 \times 3 - 1 \times 2 = 4$ 가 된다. 반면 참여자 3, 2, 1의 순서로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면 참여자 1의 한계적 기여는 0이고 참여자 2와 3의 한계적 기여는 각각 3이 된다. 6가지 경우의 각 참여자의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 2>와 같게 되는데, 샤프리 값은 이러한 한계적 기여들의 평균이다.

〈표 2〉 참여자 1, 2, 3의 샤플리값 분해

MC: 한계적 기여	1's MC	2's MC	3's MC	합계
〈1 2 3〉	1	1	4	6
〈1 3 2〉	1	3	2	6
〈2 1 3〉	0	2	4	6
〈2 3 1〉	0	2	4	6
〈3 1 2〉	0	3	3	6
〈3 2 1〉	0	3	3	6
합계	2	14	20	36
샤플리값	2/6	14/6	20/6	6

이러한 샤플리값은 협조적 게임 뿐만 아니라 불평등 분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된 것이 생산물이 아니라 전체소득의 불평등이라 생각하고, 참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등과 같은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보수합수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하면 우리는 각각의 참여자, 즉 노동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한계적 기여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샤플리값을 불평등 분해에 사용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샤플리값은 각 참여자를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이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방식은 각각의 소득원천이 불평등도에 미치는 한계적 기여를 계산할 때 해당 소득원천 이외에는 모든 가구에 0의 소득을 부여한 후 소득원천의 불평등도를 계산하는 영점샤플리 분해방법이다. 둘째 방식은 해당 소득원천 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각 소득원천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뒤에 각각의 소득원천이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는 평균샤플리값 분해방법이다.

영점샤플리값 분해방법은 가장 불평등도가 높은 자산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고, 평균샤플리값 분해방법은 점유율이 높은 소득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다. 평균샤플리값 분해는 어떤 소득의 불평등을 계산할 때 점유율이 높은 소득의 평균을 더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의 기여도를 낮추게 된다. 따라서 샤플리값 분해를 할 때에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3. 샤플리값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이성재·이우진(2017)은 재정패널 2008~2014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시계열을 전체집단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집단에 대해서도 추정하였다. 노동소득은 재정패널에서 노동소득 항목과 사업소득 항목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패널에서 부동산 및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소득의 합을 자산소득으로 정의하였다. 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부동산 자산은 부동산과 전월세보증금 총액으로 정의하였고, 금융자산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및 타지 않은 껌돈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이들이 추정한 소득점유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약 30%의 소득을 차지하고 중위 40%가 약 51%, 하위 10%가 약 19%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10% 이내의 사람들만 자산소득이 있었으나,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해 2013년에는 전체 집단의 10%가 자산소득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자산점유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자산을 기준으로 2013년에 상위 10%가 전체자산의 약 42.5%를 차지하고 중위 40%가 약 46%, 하위 50%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전체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기타자산의 경우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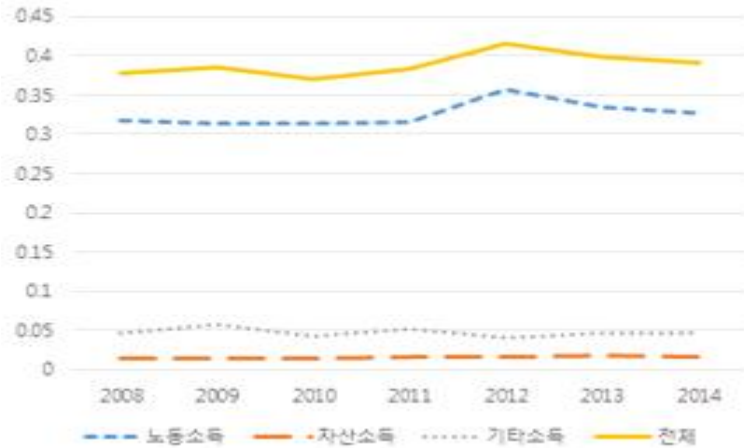
이들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의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는데 이때 지니계수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작업 이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14년에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391로 나타났고, 노동소득의 지니계수는 0.466, 자산소득의 지니계수는 0.953, 기타소득의 지니계수는 0.827로 나타났다.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으나, 노동소득은 201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2014년 기준 0.585로 나타났다. 자산의 요인별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는 0.620, 금융자산의 불평등도는 0.729, 기타자산의 불평등도는 0.629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었고 그 결과 총자산의 불평등도도 약간 완화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먼저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소득불평등의 원천

별 기여도를 살펴보자. 평균사플리값 분해방법을 사용한 경우, 2014년에 총소득의 불평등도 0.391에 대하여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0.328,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0.016, 기타소득의 기여도는 0.046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노동소득은 약 84%, 자산소득은 약 4%, 기타소득은 약 12%만큼씩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것이 된다. 영반면 점사플리값 분해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2014년에 총소득불평등도 0.391에 대해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0.138,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0.31, 기타소득은 0.218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노동소득은 약 -35%, 자산소득은 약 79%, 기타소득은 약 56%만큼씩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것이 된다.

〈그림 2〉 평균사플리값 분해방식을 통한 총소득불평등



출처: 이성재·이우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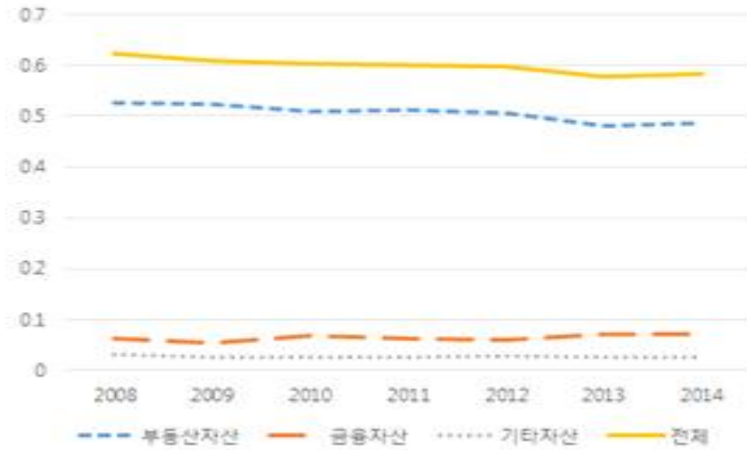
〈그림 3〉 영점사플리값 분해방식을 통한 총소득불평등



출처: 이성재·이우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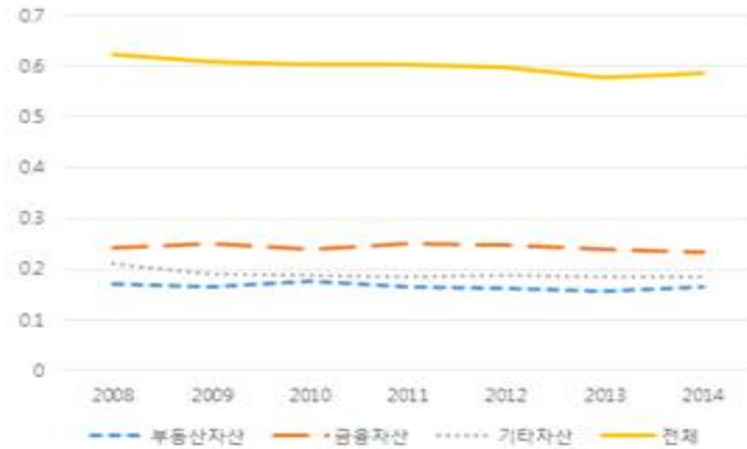
자산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사플리값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4년의 총자산의 불평등도 0.585에 대하여 부동산자산의 기여도는 0.487, 금융자산은 0.071, 기타자산은 0.026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부동산자산은 약 83%, 금융자산은 약 12%, 기타자산은 약 4%만큼씩 총자산 불평등에 기여한다. 영점사플리값 분해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2014년에 총자산불평등도 0.585에 대해 부동산자산의 기여도는 0.165, 금융자산은 0.234, 기타자산은 0.186으로 나타났다. 역시 백분율로 환산하면, 부동산자산은 약 28%, 금융자산은 약 40%, 기타자산은 약 3%만큼씩 총자산불평등에 기여한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자산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사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장 크지만, 영점사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면 금융자산보다 기여도가 작게 나타난다. 이는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분해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자산불평등도에서 부동산자산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평균사플리값 분해방식을 통한 총자산불평등



출처: 이성재·이우진(2017).

〈그림 5〉 영점사플리값 분해방식을 통한 총자산불평등



출처: 이성재·이우진(2017).

4. 소득불평등의 원인: 노동소득의 불평등인가 자산소득의 불평등인가?

피케티는 일반적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회귀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Piketty, 2014).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의 반론과 재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들어 피케티 등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자본축적의 속도가 빨라지고, 상속자산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비중이 노동소득의 비중을 앞지른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본축적가설은 지대추구가설과 비슷하게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정치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대추구가설은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존재하는 반면, 피케티 등의 자본축적가설은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많은 연구들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강신옥·김현경(2016)은 1999~2008년 동안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불평등의 증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극복하는 것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바 있다.

홍민기(2015)는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계산한 연구에서 한국의 최상위 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이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 그는 한국은 해방 이후 재산소득의 형성이 선진국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최상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최고경영자 보수의 급격한 증가나 한계 최고소득세율의 영향보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고용형태의 변화나 자영업자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샤프리값 분해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자산소득의 불평등도는 노동소득의 불평등도보다 훨씬 크며,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III. 기회의 불평등

1. 이론적 배경

그동안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과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데에는 환경, 정부의 정책, 개인의 노력, 그리고 행운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 최근 Roemer(1998, 2009)는 기회의 평등 개념에 대한 정책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경제학적 이론을 내놓았다.

로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환경, 정책규칙, 개인의 노력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개인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노력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한다. 같은 환경 하에서라도 개인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정책규칙은 환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성취의 개인들간의 격차는 줄이고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취의 격차는 온전히 보존하여 개인의 노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은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인종, 부모의 소득, 성별, 생래적 재능(inborn talent)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를 안다면 개인들이 속하는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을 나타내는 유형들을 완전하게 구성한 후에 같은 환경적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동일한 정책규칙을 적용하면, 동일한 유형 내의 개인들 사이의 개인적 성취의 차이는 개인의 노력의 차이만이 그 원인이 된다. 다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간의 경제적 성취의 평균적인 차이는 환경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2. 기회의 평등 이론의 정책적 활용

이러한 로머의 이론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논의를 정책적 토론이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이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실증분석에 응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따른 격차를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과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실의 누진세제를 선형세제로 근사화해서 관측된 한계세율을 구하고, 이론적 모형에 적절한 가정을 한 후 기회평등화를 위한 최적의 한계세율을 구해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로머의 분석들은 각국의 소득, 교육정책,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고, 2000년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로머의 조언을 바탕으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을 비교분석한 보고서(Ferreira and Gignoux 2008)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한국 자료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위한 기회의 평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우철·이우진(2008, 2009), 고제이·이우진(2011), 오성재·강창희·정혜원·주병기(2016), Cho & Lee(2017) 등이 있다. 이러한 기회의 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기회를 평등화하는 최적세율도출, 회귀분석을 통한 기회의 평등 추정, 그리고 비모수적 검정법을 통한 기회의 평등 추정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적세율 계산을 통한 기회의 평등 연구

김우철·이우진(2009)은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최적조세율을 계산한 뒤에 이를 현실의 관측세율과 비교하여 한국의 기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관측된 한계세율(t^{Obs}), 기회평등화를 위한 최적조세율(t^{EOp}), 기회평등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때의 한계세율(t^{Bench}), 기회평등화지수(v), 효율성 손실(ϵ)을 계산하였다. 노동패널의 세후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전소득자료를 독립변수로 하여 최소자승법 추정을 통해 얻게 되는 계수로 한국의 누진세제를 선형으로 근사화할 수 있다. 이제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하고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가정을 조정하면서 표준소득의 획득에 대한 기회평등화 세율을 추정한 결과, 관측된 한계세율은 17~20% 정도인 반면에 기회평등화 세율은 45~8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이우진(2009)은 기회평등을 달성하는 최적조세율을 계산한뒤 이를 현실의 관측세율과 비교하여 한국의 기회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하였다. 이들의 분석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전소득을 x , 노동시간을 L , 노동시간당 실효임금율을 w , 실효한계세율을 t , 정부가 지급하는 일인당 보조금을 T 라 하자. 그러면 선형조세함수는 $\varphi(x) = tx - T$ 라고 나타낼 수 있고 개인의 세후소득은 $y = (1-t)wL + T$ 로 나타낼 수 있다. 효용함수를 $u(y, L) = y - \alpha L^{1 + \frac{1}{\eta}}$ 와 같은 준선형으로 나타내보자. 여기서 y 는 가처분소득, α 는 소득에 대한 여가의 상대적 중요성, η 는 임금률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나타

낸다. 그러면 노동의 최적 공급량은 $L(w;t) = \left(\frac{(1-t)w}{\alpha(1+1/\eta)}\right)^\eta$ 이고 개인의 최적 세전소득은 $x(w;t) = \left(\frac{1-t}{\alpha(1+1/\eta)}\right)^\eta w^{1+\eta}$, 개인의 최적 세후소득은 $y(w;t, T) = (1-t)x(w;t) + T$ 이다.

이제 임금률의 분포를 F 라는 누적분포함수로 나타내자. 이 때 정부의 일인당 조세 수입은 $R = t \int_0^\infty x(w;t)dF(w)$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정부의 일인당 조세수입은 정부의 보조금지출(T)과 재정적자부분을 차감한 정부의 기타서비스(S)의 합과 항상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B = \int_0^\infty w^{1+\eta}dF(w)$ 라고 할 때 $T = t \left(\frac{1-t}{\alpha(1+1/\eta)}\right)^\eta B - S$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부 예산제약식의 우변은 래퍼곡선(Laffer curve)이며, T 를 최대화 하는 한계세율은 $\hat{t} = \frac{1}{1+\eta}$ 이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S 값을 추산한 뒤 정부의 예산제약식에 t 값을 대입하면 정부의 보조금지출(T)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T(t, S)$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기회평등화를 달성하는 최적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최불우 유형의 임금률합수를 F^1 라고 나타내고, $A = \int_0^\infty w^{1+\eta}dF^1(w)$ 이고 $B = \int_0^\infty w^{1+\eta}dF(w)$ 라고 할 때 수식을 정리해보면 기회를 평등화하는 재정정책은 $t^{EOP} = \text{Max}\left[1 - \left(\frac{\eta}{1+\eta}\right)\left(\frac{1}{1-A/B}\right), 0\right]$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최불우유형의 소득분포와 사회전체의 소득분포가 유사할수록 $\frac{A}{B} \rightarrow 1$ 이므로 기회를 평등화하는 최적세율 t^{EOP} 은 0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최불우유형과 사회전체의 소득분포의 격차가 커질수록 $\frac{A}{B} \rightarrow 0$ 이므로 $t^{EOP} = \frac{1}{1+\eta}$ 이 된다.

현실의 자료를 통해 조세함수를 선형근사화해서 얻은 조세율을 t^{Obs} 라고 하고, $T(t, S) \equiv t \left(\frac{1-t}{\alpha(1+1/\eta)}\right)^\eta B - S = 0$ 를 만족시키는 조세율, 다시 말해 정부가 기회평등을 위해 어떤 재정정책도 실시하지 않고 기타서비스만을 위해 세금을 지출할 때의 세율을 t^{Bench} 라고 하자.

관측세율 하에서 최불우 유형의 평균 세후소득을 $V^{Obs} \equiv V(t^{Obs}, S)$ 라고 나타내고 기회평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에서 최불우 유형의 평균 세후소득을 $V^{Bench} \equiv V(t^{Bench}, S)$ 라고 하자. 또한 기회평등화를 위한 최적 조세율 하에서 최불우 유형의 평균 세후소득을 $V^{EOP} \equiv V(t^{EOP}, S)$ 라고 나타내자. 이를 바탕으로

$\nu \equiv \frac{V^{Obs} - V^{Bench}}{V^{EOp} - V^{Bench}}$ 는 조세재정정책의 기회평등화 지수(ν)이다. ν 가 0에 가까울수록 관측된 한계세율과 기회평등화를 위한 재정지출이 하나도 없을 때의 세율이 같으므로 기회평등화 정도는 낮다. 반면 ν 가 1에 가까울수록 관측된 한계세율과 기회평등화를 위한 최적 조세율이 비슷하므로 기회평등화 정도는 높다.

일반적으로 $V^{EOp} > V^{Obs} > V^{Bench}$ 이므로 $\nu \in [0,1]$ 이지만 $V^{Obs} > V^{EOp} > V^{Bench}$ 이 되면 ν 값은 1보다 커지고 이 경우를 **overtax1**이라 한다. 반면 $V^{Obs} > V^{Bench} > V^{EOp}$ 인 경우 ν 는 0보다 작아지고 이 경우를 **overtax2**라 한다.

기회평등화 재정정책은 다른 조세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효율성 손실을 가져오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varepsilon \equiv \frac{\int_0^{\infty} x(w; t^{EOp}) dF(w)}{\int_0^{\infty} x(w; t^{Obs}) dF(w)}$ 이다.

$\varepsilon < 1$ 일 때 기존의 재정정책에서 기회평등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효율성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varepsilon > 1$ 일 때는 기존의 재정정책에서 기회균등 정책을 실시할 경우 효율성 이득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overtax1**이거나 **overtax2**일 경우 $\varepsilon > 1$ 이다.

김우철·이우진(2009)의 계산에 의하면 기회평등화를 위한 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조세수입이 기회평등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기타 사회서비스만을 위해 사용될 때 필요한 세금을 나타내는 벤치마크세율과 관측된 한계세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한국의 정부지출이 기회평등화를 위해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3〉 최적세율 국제비교 (환경 = 부모 학력, 소득 = 표준소득)

	t^{obs}	t^{EOp}	t^{Bench}	ν	ε
스페인 (1991)	0.376	0.605	0.080	0.748	0.973
이탈리아 (1993)	0.232	0.819	0.156	0.160	0.920
미국 (1991)	0.243	0.647	0.182	0.200	0.955
영국 (1991)	NA	NA	NA	NA	NA
벨기에 (1992)	0.531	0.535	0.316	0.999	0.999
네덜란드 (1995)	0.533	0.474	0.253	overtax1	1.007
서독 (1994)	0.364	0	0.225	overtax2	1.028
스웨덴 (1991)	0.524	0	0.203	overtax2	1.046
덴마크 (1993)	0.440	0	0.225	overtax2	1.035
노르웨이 (1995)	0.393	0	0.258	overtax2	1.030
한국 (2004/05)	0.206	0.728	0.077	0.282	0.938

출처: 김우철·이우진(2009).

〈표 4〉 최적세율 국제비교 (환경 = 부모 직업, 소득 = 동등화 소득)

	t^{obs}	t^{EOP}	t^{Bench}	ν	ε
스페인 (1991)	0.400	0.639	0.110	0.731	0.970
이태리 (1993)	0.247	0.741	0.153	0.228	0.938
미국 (1991)	NA	NA	NA	NA	NA
영국 (1991)	0.384	0.743	0.216	0.447	0.949
프랑스 (1994)	0.349	0.654	0.161	0.543	0.962
벨기에 (1992)	0.555	0.397	0.257	overtax1	1.018
네덜란드 (1995)	NA	NA	NA	NA	NA
서독 (1994)	0.405	0.401	0.223	0.999	0.999
스웨덴 (1991)	NA	NA	NA	NA	NA
덴마크 (1993)	0.369	0	0.182	overtax2	1.027
노르웨이 (1995)	0.389	0	0.203	overtax2	1.030
한국 (2005)	0.202	0.649	0.093	0.292	0.952

출처: 김우철·이우진(2009).

이들이 도출한 결과를 다른 선진국들의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기회평등화를 위한 세율은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측된 한계세율은 낮다. 이는 한국의 조세정책이 기회평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서독 및 스페인과 비교해보면 관측된 한계세율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회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서독은 0이고 스페인은 0.605로 나온다. 이는 관측된 한계세율만을 근거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위한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에 비해 결과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이는 아마도 동일직종 및 직급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의 임금체계의 특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한국은 환경으로 인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성취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2) 회귀분석을 이용한 방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기회의 평등을 살펴보는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몇 개를 선정한 뒤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잔차항은 모두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격차로 간주한다.

고제이·이우진(2011)은 아버지의 학력을 유일한 환경변수로 하고 그 이외의 영향을 모두 개인의 노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유일한 환경변수가 개인의 학력불평등에 16~59%의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소득불평등에는 2~1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변수를 유일한 독립변수로 사용했으므로 생략변수 편이로 인한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의 성취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 중 단 하나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아버지의 학력이 개인의 교육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어변수	종속변수가 학령인 경우	종속변수가 표준소득으로 계산한 임금율인 경우		종속변수가 동등화소득으로 계산한 임금율인 경우	
Cons	15.41*** (67.38)	-6571.6*** (-7.59)	-4381.1*** (-4.81)	-2390.6*** (-3.48)	-706.6 (-0.98)
Age	-0.0905*** (-18.47)	266.5*** (6.42)	316.3*** (7.22)	95.42** (2.90)	133.6*** (3.87)
Age^2		-2.602*** (-5.30)	-3.436*** (-6.63)	-1.601*** (-3.93)	-0.000531** (-2.71)
Edu		236.7*** (25.49)		181.1*** (24.71)	
Edu_Dad	0.220*** (29.31)	17.79** (3.12)	68.89*** (12.20)	20.55*** (4.55)	59.48*** (13.35)
Obs.	6004	5482	5482	5727	5727

출처: 고제이·이우진(2011).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Cho & Lee(2017)에서는 환경변수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기회불평등도를 추정한다. 선정된 환경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성별, 출생년도, 형제자매 수, 자라난 지역이고, 이들이 학령연수와 노동패널의 세전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회귀분석의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대체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대도시 지역에서 자랐을수록, 형제자매의 수가 적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환경요인이 개인의 교육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Education	Labor Income	BMI
Fathers Education	0.1834*** (19.65)	23.2* (2.37)	-0.0191 (-1.32)
Male	0.6468*** (8.67)	1918.1*** (25.51)	1.8518*** (15.59)
Grown-up region	0.2157*** (8.67)	1.0844 (0.01)	0.0926 (0.74)
Number of Siblings	-0.0592* (-2.27)	32.32 (6.27)	-0.0596 (-0.48)
Age	-0.0237** (-3.27)	45.39*** (6.27)	0.4000*** (2.63)
Age squared			-0.0043** (-2.37)
Education		269.45*** (15.63)	
Workout			-0.4834 (-0.82)
Constant	12.09*** (39.29)	(-10.01)	(4.25)
Obs	3427	2851	1627

출처: Cho & Lee(2017).

다섯 개의 환경적 요소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플리값 분해를 시행한 결과, 교육불평등의 31%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기여했고, 성별은 7%, 출생년도는 4%, 형제자매 수는 3%, 자라난 지역은 2%씩 기여하였다. 소득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성별이 40%,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11%로 나타났다. 개인의 비만도를 기초로 만든 건강불평등도에 대해서는 성별이 22%를 기여했고, 연령이 14%를 기여했다.

〈표 7〉 교육불평등도에 대한 평균사플리값 분해

	GINI		CV	
	AC	RC	AC	RC
Fathers Edu	0.030	0.309	0.052	0.279
Male	0.007	0.071	0.012	0.066
Grown-up reg	0.002	0.024	0.004	0.021
No. of Siblings	0.003	0.029	0.005	0.024
Age	0.004	0.039	0.006	0.032
Residual	0.051	0.529	0.108	0.578
Total	0.096	1.000	0.188	1.000

출처: Cho & Lee(2017).

〈표 8〉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평균사플리값 분해

	GINI		CV	
	AC	RC	AC	RC
Fathers Edu	0.037	0.107	0.052	0.076
Male	0.138	0.396	0.262	0.384
Grown-up reg	0.002	0.007	0.004	0.005
No. of Siblings	0.000	0.000	0.000	0.000
Age	0.003	0.008	0.004	0.006
Residual	0.168	0.482	0.360	0.528
Total	0.348	1.000	0.682	1.000

출처: Cho & Lee(2017).

〈표 9〉 건강불평등도에 대한 평균사플리값 분해

	GINI		CV	
	AC	RC	AC	RC
Fathers Edu	0.001	0.013	0.001	0.010
Male	0.014	0.221	0.026	0.228
Grown-up reg	0.000	0.005	0.001	0.004
No. of Siblings	0.000	0.003	0.000	0.003
Age	0.007	0.141	0.015	0.133
Workout	0.002	0.001	0.000	0.003
Residual	0.039	0.615	0.07	0.618
Total	0.063	1.000	0.113	1.000

출처: Cho & Lee(2017).

3) 비모수적 분포함수의 추정과 검정을 이용한 방법

Lefranc et al.(2009)은 기존의 기회의 평등 연구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한 환경과 개인의 노력에 더해 운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고려한다. 운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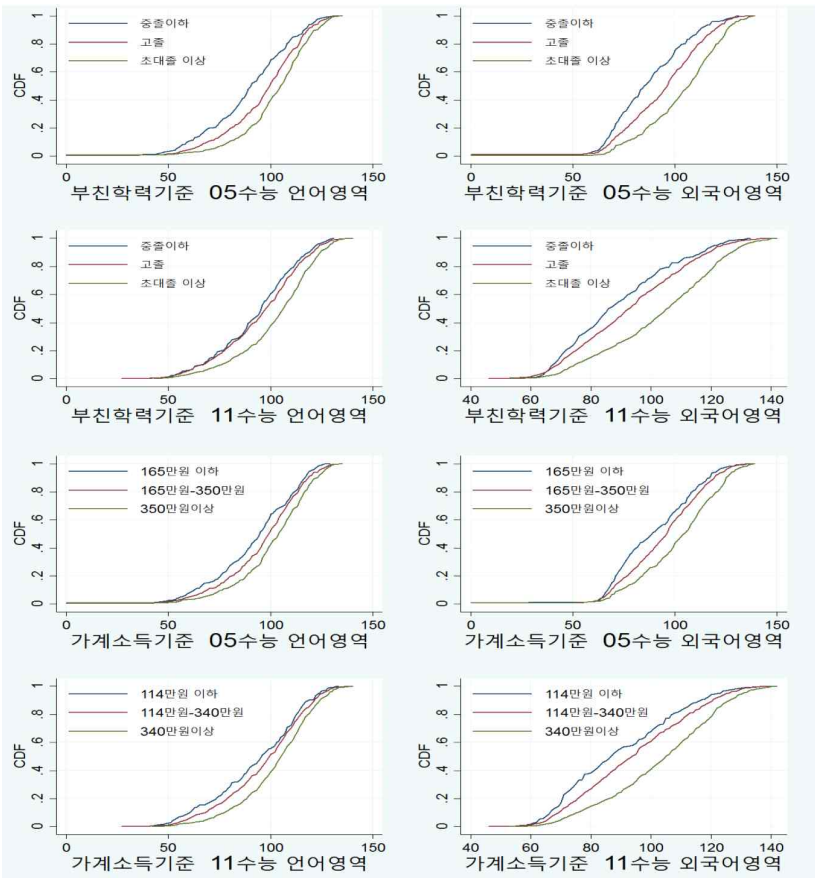
이들은 운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면서 기회의 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률지배 개념을 적용한다. 확률지배는 두 개 이상의 확률분포함수 간의 위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각각의 환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취를 확률분포도에 따라 표시했을 때 환경에 따라 두 확률분포 사이에 확률지배가 성립한다면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확률지배에 대한 검정은 분포에 대해 약한 가정만 해도 검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비모수 검정법을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김우철·이우진(2008)이 이러한 확률지배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획득에

다른 기회의 평등을 분석하였다. 다만 이들은 환경변수에 따른 분포함수의 추정만 실시하고 통계적 검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오성재 외(2016)는 환경에 따른 성취의 분포함수를 비모수적 검정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기회불평등을 분석한다. 이들은 2005년과 2011년의 수능성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혹은 재학, 2~3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환경변수로는 남성보호자의 학력, 가계의 월평균소득의 두 변수를 고려한다. 분석의 결과는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에서 두 개의 환경변수에 따른 기회불평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4〉 환경요인별 수능점수 누적분포



출처: 오성재 외(2016).

이 연구의 흥미로운 사실은 수능성적 뿐만 아니라 자기학습시간과 사교육비지출액의 분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 월평균소득이라는 두 환경변수 모두에서 1차 확률지배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로머의 기회평등이론을 다루면서 개인이 실제로 들이는 노력의 시간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인의 노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시험성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의 공부시간과 사교육비 지출액 역시 환경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IV. 거시자료를 활용한 불평등 분석

1. 이론적 검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대해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었다. 이 장에서는 국가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할하는 기능적 소득분배 이론에 따라 거시적인 동학을 살펴본다.

거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불평등에 관해 연구할 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등장하는 이론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Piketty, 2014). 여기에서 피케티는 두 개의 자본주의의 근본법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한 나라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K)을 국민소득(Y)으로 나눈 비율인 자본-소득비율(β)과 자본수익률(r)과의 곱이 자본소득분배율(α)과 같다는 항등식을 제시한다. 둘째는, 자본-소득비율(β)이 장기적으로는 저축률(s)을 성장률(g)로 나눈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근본법칙이 함축하는 것은 자본수익률(r)이 높거나 자본-소득비율(β)이 높으면 자본소득분배율(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g)이 낮으면 자본-소득비율(β)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역사적으로 2차대전 이후 몇십년 동안 경제성장률(g)이 자본수익률(r)보다 높았던 시기는 전체 인류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며, 이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상회할 경우에 상속재산이 노동소득으로 축적한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으로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은 선진국들은 다시 세습자본주의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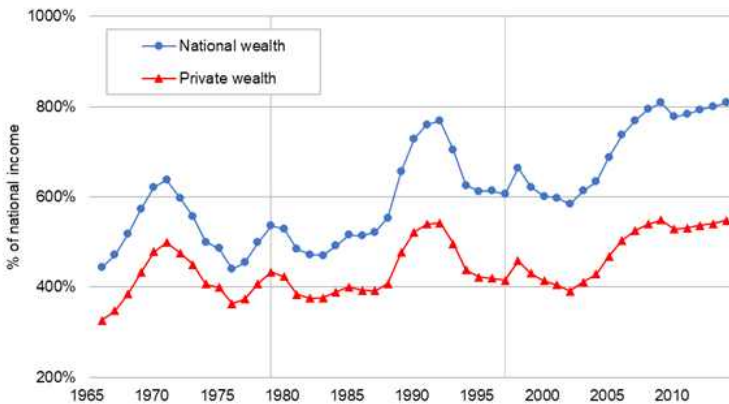
2. 한국의 피케티 비율 추정

피케티의 논의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을 추계한 연구로는 표학길(2015), 주상영(2015), Lee & Yoon(2017) 등이 있다. 표학길(2015)의 연구는 추정 기간에 일제 강점기까지 포함되면 가장 긴 시계열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대차대조표를 활용한 추계가 아니어서 Piketty(2014) 등에서 추정한 방식과 달라 외국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주상영(2015)의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피케티의 논의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 시계열이 2000년 초반 이후로 매우 짧다.

Lee & Yoon(2017)은 국민대차대조표와 한국은행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1966~2014년의 50여년간의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을 추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은 196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은 주로 국부의 자본-소득비율의 증가와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자본-소득비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해보았는데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197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의 부분적인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5〉 한국의 자본-소득비율(β), 1966~2014년



출처: Lee & Yoon(2017).

지속적으로 자본-소득비율이 증가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 국부와 민간부를 주택, 농경지, 기타국내자본, 순외국자본으로 나누어보았다. 이때 주택과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농경지는 1960년대에는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하였고, 주택과 기타국내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을 피케티 등이 추정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민간부의 기준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부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자본-소득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과 함께, 공공부문의 부채가 많지 않고, 국민연금이 정부자산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높은 국부 기준의 자본-소득비율이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Lee & Yoon(2017)은 또한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본소득분배율(α) 역시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의 자본소득분배율을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연구마다 접근방식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은행은 공식 발표 추계에서 이 부분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자본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중에 일정부분을 노동소득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자영업자의 일부를 노동소득만 얻는 노동자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자본소득을 얻는 자본가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두 견해는 실제 자영업자의 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은 같다. Lee & Yoon(2017)은 주상영·전수민(2014)에서 고려한 한국의 자본소득분배율의 여러 가지 추정방법 중 피케티가 추정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리법인을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자영업자의 소득 이외의 소득들간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한 자본소득을 요소비용국민소득으로 나누어주면 자본소득분배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자본소득분배율을 추정해보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6년부터 1979년까지 상승하였고,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앞에서 보았던 한국의 소득점유율 추세와 비교해보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 10% 소득자들의 소득점유율과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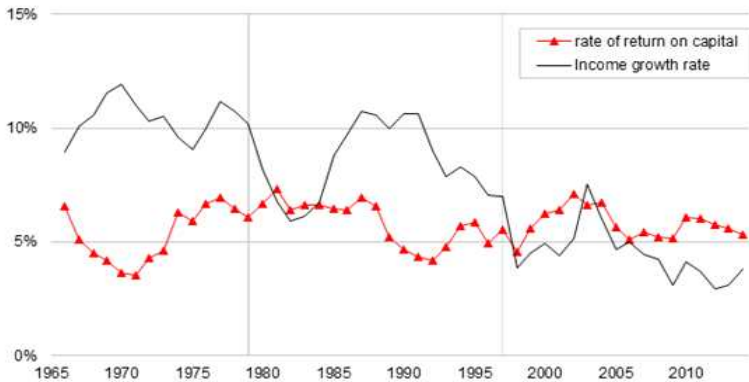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자본소득분배율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출처: Lee & Yoon(2017), 김낙년(2018), 홍민기(2015).

위에서 추정한 자본-소득비율(β)과 자본소득분배율(α)을 통해 자본수익률(r)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수익률은 대략 6% 내외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 값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성장률(g)보다 낮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도성장기간이었던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꾸준히 상회했지만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선진국들과 같이 앞으로 상속재산 등에 따른 불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앞으로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7〉 한국의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



출처: Lee and Yoon(2017).

3. 자본-소득비율 증가의 요인 분석

마지막으로 Lee & Yoon(2017)은 Piketty & Zucman(2014)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자본-소득비율을 저축에 의한 증가분과 자본이득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누어보았다. 이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은 연평균 8.3%씩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저축으로 인한 자본-소득비율의 증가율은 연평균 3.3%이고, 자본이득에 따른 자본-소득비율의 증가율은 연평균 4.9%로 나타났다.

〈표 10〉 자본-소득비율의 성장분해

기간	자본-소득비율		경제 성장률	자본-소득비율 성장분해			자본축적의 기여비중		
	β_t	β_{t+1}		부의 성장률	저축으로 인한 성장률	자본이득으로 인한 성장률	초기의 부	저축	자본 이득
1966-2014	326%	547%	7.2%	8.3%	3.3%	4.9%	2%	39%	59%
								40%	60%
							2%	47%	51%
								48%	52%
1966-1979	326%	433%	10.5%	12.9%	2.6%	10.0%	21%	16%	63%
								21%	79%
							21%	20%	60%
								25%	75%
1980-1997	433%	415%	7.9%	7.7%	4.5%	3.0%	26%	44%	30%
								60%	40%
							26%	46%	27%
								63%	37%
1998-2014	415%	547%	3.9%	5.6%	2.4%	3.1%	40%	27%	34%
								44%	56%
							40%	26%	34%
								43%	57%

출처: Lee & Yoon(2017).

만약 자본이득이 없이 저축에 의해서만 자본-소득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국부 기준의 자본-소득비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을 것이고, 민간부 기준의 자본-소

득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다. Piketty & Zucman (2014)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자본이득은 상당부분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의 소득 및 자산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들을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제기하였다.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미시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과 거시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로 대별한 후 요약하였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1) 불평등의 수준 및 추이에 대한 연구들, (2) 다양한 소득형태가 전체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3)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2)와 (3)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피케티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거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 특히 기능적 소득분배론에 입각한 연구들도 요약한다.

2장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각각 얼마만큼씩 기여하는지 샤프리값 분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연구들의 통설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노동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장에서는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이 사회경제적인 성취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주어진 환경의 차이에 의한 부분과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함께 기회의 불평등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피케티의 연구들에 의해 촉발된 거시자료를 활용한 불평등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이후 피케티가 강조한 $r > g$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기회의 평등에 대하여 남겨진 과제들을 몇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득의 성취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취나 부의 축적, 또는 행복한 삶을 위

한 기회의 평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샤플리값 분해에서 자산소득불평등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불평등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의 샤플리값 분해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회의 평등 관점으로 볼 때 부모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중 어느 쪽이 자녀의 기회의 평등을 더 제약하는지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욱·김현경. 201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 1999년과 2008년의 비교”, 《한국경제의 분석》, 22(2): 1-43.
- 고제이·이우진. 2011.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성취”, 《재정학연구》, 4(2): 47-87.
- 김낙년. 2018.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2018-01.
- _____.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 김우철·이우진. 2008.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9. “Roemer의 기회평등개념과 한국의 소득세정책.”, 《경제분석》, 15(3): 129-168.
- 남상호. 2015.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분포 분석.”, 《재정정책논집》, 17(3): 143-171.
- 박기백. 2014.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7(2): 95-116.
- 오성재·강창희·정혜원·주병기. 2014. “가구환경과 교육성취의 기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한 연구.”, 《재정학연구》, 9(4): 1-32.
- 이성재·이우진. 2017.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57-109.
- 주상영. 2015.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경제발전연구》, 21(1): 21-76.

- _____.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31-65.
- 표학길. 2015.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케티가설의 검증.”, 《한국경제포럼》, 8(1): 45-81.
- 홍민기. 2015.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경제발전연구》, 21(4): 1-34.
- _____. 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Acemoglu, Daron, & David Autor. 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4, pp.1043~1171), Elsevier.
- Bebchuk, Lucian A. 2009. *Pay Without Performance: The Unfulfilled Promise of Executive Compens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 Jinsoo, & Woojin Lee. 2017.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South Korea*. Working Paper. Korea University.
- Davies, James B., Rodrigo Lluberas, & Anthony F. Shorrocks. 2014. *Global Wealth Databook 2014*.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 _____ & Anthony F. Shorrocks. 2000.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1, pp.605~675), Elsevier.
- Ferreira, Francisco, & Jérémie Gignoux. 2008.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Latin America*. The World Bank.
- Freund, Caroline, & Sarah Oliver. 2016. *The Origins of the Superrich: The Billionaire Characteristics Databas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16-1.
- Goldin, Claudia Dale, & Lawrence F. Katz. 2009.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Krugman, Paul. 2014. “Why we're in a new gilded age.” *New York Review of Books*.
- Lefranc, Arnaud, Nicolas Pistoiesi, & Alain Trannoy. 2009 “Equality of opportunity and luck: Definitions and testable conditions, with an application to income in F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11): 1189~1207.
- Lee, Woojin & Younghoon Yoon. 2017. “Capital in South Korea: 1966-2014.” *Social Choice and Welfare*. 49(3-4): 671~708.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 Emmanuel Saez.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1~41.
- _____ & Gabriel Zucman.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3): 1255~1310.
- Roemer, John.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Equality of opportu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Saez, Emmanuel, & Gabriel Zucman. 2016.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13: Evidence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2): 519~578.
- Stiglitz, Joseph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W Norton & Company.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n South Korea

Woojin Lee

This paper summarizes existing economic literature on inequality in South Korea and provides critical comments on it,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inequality. We discuss remaining issues and provide future research topics in this field. We discuss microeconomic approaches to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as well as macroeconomic approaches to them

※ Keywords: income inequality, wealth inequal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microeconomic approach, macroeconomic approach